

전북자치도, 국가하천 홍수피해 막는다

유지보수비 10억원 추가 확보... 총 67억원 투입 홍수기 전·중·후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키로

전북자치도가 도내 국가하천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부로부터 단경강, 동진강 등 11개 국가하천(L=352km)의 유지관리 권한을 위임받고, 국가하천 홍수 피해에 대비해 올해 국비 67억원을 투입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도는 올해 국가하천 유지보수비(국비) 10억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67억원을 확보했고, 이는 지난 10년 평균 60억원 대비 7억원 가량을 상회하는 규모다.

이에 더해 9월 유보금이 추가 교부

되면 실질적 예산확보는 70억원 이상 일 전망이다.

이번 추가 확보한 예산 중 7억원만은 도가 직접 국가하천 점검 용역을 추진하는 데 투입되고, 3억원만은 시·군에 교부돼 홍수에 대비한 준설, 제방정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도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홍수기 전에는 홍수방어를 담당하는 제방이나 구조물 등을 사전 점검하고, 홍수기 유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준설·수목제거 작업을 사전에 추진한다.

홍수기에는 제방, 배수통관 등 하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전문가가 즉시 투입돼 현장을 점검하고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는 등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홍수기 후에도 집중호우에 의해 붕괴 또는 유실되는 않았으나, 균열이 발생한 하천시설 중 콘크리트 구조물, 기계설비, 도장 및 전기·통제설비 등을 대상으로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도는 기초조사를 실시해 하천 제방이나 지반이 낮아 구조적으로 홍수피해에 취약하거나 하천공사 등으로 풍수해로부터 취약한 지구를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

이다.

특히, 올해 3월에 개정된 '홍수취약지구 조사·지정·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승격 예정인 전주천 및 오수천과 국가하천 배수영양구간을 조사해 홍수취약지구 지정을 검토한다.

홍수취약지구단 여유고가 부족하거나, 저지대로 인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을 말하며, 해당 지구로 지정되면 시설물 보강 등이 이뤄져 해제되기 전까지 홍수기 전·후 정기점검을 시행한다.

강해원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극한 강우와 같은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하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오늘부터 사회조사 추진

5월 3일까지 도내 1만3515개 가구 대상 방문

전북자치도가 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전북의 미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2024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조사'는 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승인통계로 지난 2007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직접 방문해 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단, 면접이 어려운 경우에는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가구·가족, △소

독·소비, △고용·노사, △복지, △사회참여, △지역 특성(도, 시·군) 등 6개 분야로, 도 공통항목 43개에 각 시군별 특성항목 5~17개(평균 9개)를 더해 각 48~60여 개(평균 52개)이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는 12월에 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사회조사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조사원 방문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주거비 상승으로 신청요건 완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12일부터 폐지됐다.

이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도는 이번 신청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월세 규모에 관계없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 혜택을 받고 주거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와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카진단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00-0777)나 해당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지난 1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56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에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오혁재 35사단장, 예비군지휘관, 군부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군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전북자치도,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개최

예비군 지휘관·여성 예비군 등 유공자 표창 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56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예비군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오혁재 35사단장, 예비군지휘관, 군부대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

사 및 대통령 축하메시지 대독, 예비군 대표의 결의문 낭독, 예비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예비군 육성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남원시 향교·동충동대 추연근 동대장을 비롯한 12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예비군의 날은 1968년 4월 1일 향토예비군 창설을 기념하고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고자 매년 4월

첫째 금요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 예비군은 79,713명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안보와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예비군이 있어 든든하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북과 국가의 안보를 위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란다. 도에서는 예비군의 훈련 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청정수소 산업지도' 다시 그린다

도, 2019년 수립 1차 기본계획 성과분석·환경 변화 반영 국책사업 발굴·전북 주력산업 연계 등 종합계획 착수

수소경제 이행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그려가는 전북자치도가 청정수소 산업지도 다시금 그려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수소분야 전문가 '전북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9년 수립한 1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분석과 함께, 국내외 수소산업 정책 및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용역을 맡은 전북연구원은 오는 12월까지 △자동차·탄소·조선 등 주력산업과의 연계방안 △동부권·농어촌 연계 균형발전 모델 등을 아우르는 단기 5년, 중장기 10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 및 수소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5년마다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4대 전략 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그간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예타 기획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추진 △

수소차, 수소충전소 보급 및 전주?안주 수소시범도시 조성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다만, 1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이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2021년),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2022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정부의 정책이 변화하고 있어 재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그린암모니아, 청정메탄올,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등 변화가 이뤄지면서 이를 반영한 2차 기본계획을 통하여 앞으로의 전북 수소산업을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종훈 전북자치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 수소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 전북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하며 전북 수소산업 육성의지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